

제7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원탁회의 개최

□ 회의개요

- (일시/장소) '22. 7. 14.(목) 10:30~11:30 / ZOOM 영상회의(회의ID 별도 안내)
- (참석대상) 위원회 사무국장(상임위원) 등 18명
- (주요내용) 자치경찰제 주요 현안 논의

□ 회의안건

- ① 위원회 소속 경찰관 파견 연장 관련 현안 논의 - 회의자료 2p
- ② 위원회별 제출 안건(경기남1, 전북1) - 회의자료 5p , 12p
- ③ 2023년 예산편성 관련 논의(재정분권 관련 등) - 회의자료 13p
- ④ (기타) 위원회별 시책 사업 및 참고사항 공유

□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30 30'	○ 회의준비 (장비 테스트 등)	
10:30~10:35 5'	○ 모두발언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10:35~11:25 50'	○ 안건토의	
11:25~11:30 5'	○ 마무리말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1

(서울) 경찰관 파견 관련 자치행정비서관 면담 결과 공유

□ 면담 개요

- 일시·장소 : '22.7.8.(금) 11:00~12:30, 대통령실(자치행정비서관실) 및 인근 식당
- 참석(6명)
 - 대통령실(2) :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총경 유승렬
 -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4) : 회장(서울 위원장), 간사(서울 사무국장) 등

□ 주요 내용

○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서울 자치경찰위원장)

- 적정한 정원산정 절차 및 근거 없는 획일적인 정원 배정(시·도별 3명)으로 134명의 정원 외 인력이 각 시·도 사무국에 파견근무 중(8월말 만료)이나, 행안부는 정원 확대 곤란, 인사혁신처도 파견연장은 어렵다는 입장 고수 中
- 현재 사무국 경찰 근무 인력은 각 시·도자경위와 시·도경찰청간 협의를 통해 지속 증원한 것으로 오히려 지금보다도 추가적인 경찰 인력이 필요한 상황
- 사무국 근무는 경찰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他 부처 파견과는 성격이 확연히 다르며,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해서도 파견 경찰 현원의 정원화 및 현원 유지는 필수적이기에 대통령실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치를 건의드립니다

○ 자치행정비서관

- 갑작스러운 일원화 제도 시행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134명이 8월말 파견 종료됨을 익히 알고 있고, 당장 해당 인력 복귀 시 위원회 운영이 안 될 것임을 알고 있기에 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8월말 파견 만료 문제는 1년 연장이 힘들다면 단기간 단위로 연장하면 될 것이나, 매년 주기가 돌아오고 그 이후는 삭감될 수 있기에 1~2년 연장이 아닌 정원 확보 또는 재배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임
- 다행히도 경찰청-행안부 간 실무협의체 발족 및 행안부 경찰국 내 자치경찰 지원부서 신설 등 자치경찰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의 장이 계속 열릴 것이기에 8월까지 해결할 시간이 있고, 관련 부서에도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 기타

- 행안부에서 전환사업에 대한 비용보전을 '21년 예산기준으로 통보한 것은 불합리하며, '23년 예산편성에 어려움 있음을 설명한 바, 세부내용 행안부에 건의해주기로 함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주민의 삶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파견경찰관 파견종료 유예 등을 건의드립니다

□ 건의배경

- 각 시·도 자경위 사무국에 정원 외 경찰관 추가 파견, 치안행정업무 수행
 - 모든 시·도 자경위 사무국에 업무량 고려 없이 경찰정원 3명 일률 배정됨
 - 경찰 3명으로는 자경위에 부여된 치안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추가파견 운영 중

※ 시·도별 추가 파견 경찰관 현황 : 모든 시·도에서 경찰관 추가 파견 운영 중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남	경기북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정원	51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현원	185	22	13	10	14	11	8	10	12	10	9	11	13	10	8	8	9	7
추가파견	+134	+19	+10	+7	+11	+8	+5	+7	+9	+7	+6	+8	+10	+7	+5	+5	+6	+4

- 단, 파견기간 종료('22.8월)를 앞두고 일괄 파견복귀 시 치안행정 차질 우려
 - 정원 외 파견경찰관 파견기간이 6개월에 불과('22.2~8월)하고, 파견기간 종료 직전
 - 현재 추가 파견 경찰관 전체 일괄복귀 논의 중으로, 대시민 치안행정 차질 우려

※ 서울 자경위 정부건의 시('22.4~6월) 기관별 입장

- ▶ (행정안전부) 새 정부 공무원 증원 최소화 기조로 인해 정원확대 곤란
- ▶ (인사혁신처) 파견정원 확보 등 상황변화가 없어 추가 파견연장 곤란

□ 파견경찰관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 파견사유 발생시 기관장이 파견하되, 1년이상 파견시 인사혁신처 협의 필요
 - 시·도 자경위 경찰 파견사유 :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제1호)
 - 파견절차
 - <1년 미만> 파견요청(시·도) → 경찰청 승인 → 파견
 - <1년 이상> 파견요청(시·도) → 경찰청-시·도 협의 → 경찰청-인사혁신처 협의 → 파견

□ 경찰관 추가파견 필요성

-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치안사무 관련 지휘·의결 등 **실질적 경찰행정 수행**
 -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자치경찰사무’의 기획·집행 등 관련 전반사항을 책임지고 수행 중으로, 지자체 소속 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 경찰행정을 수행하는 기관

※ 시도 자경위 주요 소관사무 (경찰법 제24조)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평가 및 시책 수립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임용·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고충심사 등
 -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등
- 각종 경찰행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및 전문성이 필요

- 적정 경찰인원 검토 없이 **정원 일률 배정은 내용적·절차적으로 부당**
 - 적정한 정원산정 절차 및 근거 없는 일률적 정원 배정은 심각하게 불합리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마련 시 사전협의 없이 제정안 공개('20.12.11), 지자체 의견 반영 없이 12.31 제정
- 자경위로의 파견은 ‘경찰본연의 업무’ 수행으로, **일반적인 파견과 성격 상이**
 - 일반적인 파견은 ‘한시적인 타 기관업무 지원’인 반면,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는 자치경찰사무(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휘·운영 등 ‘경찰 본연의 업무’로,
 - 자경위로의 경찰 파견은 외형은 ‘파견’ 형태이나, 각 경찰기관 내부 근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일반 파견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 **인수위 국정과제** 및 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해서도 **파견경찰관 현원 유지 및 현원 정원화는 필수적임**

건의사항

- ◆ 《단기》 **파견근무기간** 등은 **시·도자경위-시·도경찰청간 협의 결정**토록 조정 건의
 - ▶ 지역의 치안사항을 시·도경찰청-자경위 간에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정원 증원 시 까지 경찰관 파견인력 및 기간을 양자간 협의하여 결정·처리토록 조정함이 타당
- ◆ 《중장기》 현재 사무국에 **파견된 경찰 현원을 정원으로 증원** 반영 건의
 - ▶ 현행 파견 경찰인력은 시·도-시·도경찰청간 업무분석 및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된 적정 인원으로, 업무성격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전원 정원화 요청

□ 제안이유

- 국가 기관인 경찰청(서)에서 자치경찰사무 예산으로 공사·용역·물품 계약 시, 「국가계약법」(기획재정부)이 아닌, 「지방계약법」(행정안전부)에 따라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업무 혼선 발생

□ 세부내용

- (현 황) '22.5월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 따라, 각 시·도 경찰청(서)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예산 집행 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 추진 중임

《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질의회신 》

- ◆ 경찰청(서)의 자치경찰사무 예산 집행 담당자가 「지방회계법」에 따라 지자체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되었으므로, 해당 담당자가 계약하고자 할 때는 「지방계약법」을 따라야 함 ('22.5.12., 경상남도 회계과 질의에 따른 회신)

○ (문제점①)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차이로 인한 업무 혼선 발생

- 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의 세부내용 차이*로 인한 업무담당자, 계약상대자 혼란 발생 예상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수의계약 적용범위, 적격심사기준,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 등

- 「지방계약법」은 회계예규가 많고 복잡하여 회계 교육 없이는 계약법 등 적용하기가 어려움

○ (문제점②) 자치경찰사무 회계 감사 등 우려로 업무 공백 발생

- 경찰청(서) 계약담당부서(경무과)의 감사 시, 해당 기관은 「지방계약법」을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므로 계약 업무 회피로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음

□ 공동건의 요청사항

- 경찰청(서) 경무과 등 직원 대상 지방회계(계약) 교육 실시 [→경찰청,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 경찰청(서) 인원 증원 통한 자치경찰사무 회계(계약) 전담 직원 배치 (→경찰청)

[참고자료] 계약예규(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전문

(2022.6.1. 일부개정)

기 획 재 정 부

목 차

〈 계약예규 〉

1.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2. 예정가격 작성기준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4. 적격심사기준
5.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6.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공동계약운용요령
9. 공사계약일반조건
10. 공사입찰유의서
11. 용역계약일반조건
12. 용역입찰유의서
1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1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15. 종합계약집행요령
16.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폐지)
17.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8.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시행 2022. 1. 11.] [행정안전부예규 제 197호, 2022. 1. 7.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 목 차 ||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40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82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116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141
제6장	선금. 대가 지급요령	179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192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210
제9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232
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240
제11장	입찰 유의서	249
제12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265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286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329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355
제16장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요령	374
제17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385
부 칙	412

[시행 2022. 7. 1.] [행정안전부 예규 제216호, 2022. 6. 30.,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안 전 부

|| 목 차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1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52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53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197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29
제6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244
제7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284
제8장 설계공모 운영요령	313
제9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30
제10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344

□ 추진배경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시군 경찰서에서도 시행하여 도민 편의를 도모하고, 도민에 대한 동일한 인센티브 지원 기준 적용하여 자치단체 간 운전면허증 반납률 격차 해소

◆ 추진경과 ◆

- 시군 및 경찰서 현장간담회를 통한 안건발굴(26개소) : '22.4.18. ~ 5.13.
- 업무개선 관련 실무협의회 교통안전분과 회의 : '22.6.3.
- 제31차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 / 관계기관 통보 : '22.6.28. / '22.7.11.

□ 현 황

- 2020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 시행하여 주소지 주민센터에 운전면허증 반납 및 인센티브 신청 중으로, 경찰서에서도 운전면허 반납이 가능하나 인센티브 신청은 받아주지 않아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 발급 후 자치단체를 재방문하여 인센티브 신청
- 도내 인센티브 지원액 및 지원기준이 다른 시군이 있어 도민 혜택 상이
 - (지원액) 13개 시군 도비매칭 및 시군비로 20만원 지원, 군산시 10만원 지원
 - (지원기준) 13개 시군 70세이상 면허 자진반납자 기준, 완주군 추가기준으로 책임보험 가입 및 차량소유 여부 확인

□ 개선권고 내용

- 전북경찰청장은 경찰서 방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시 기초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등을 자치단체에 직접 통보하여 원스톱 처리 권고
- 전북도지사는 예산 집행에 있어 동일한 지원기준(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마련하여 도민이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군산시와 완주군은 예산확보나 조례개정 등을 통해 도민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권고

[경찰청 자료] 2차 재정분권 관련 지방이양 지원 개요

□ 자치경찰사무 예산 관련 사항

- ('22년) 경찰청에서 각 시·도에 국고보조금으로 예산 지원
- ('23년 이후) 자치경찰사무 예산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어 시·도지사가 시·도의 자체재원으로 자치경찰사무 예산을 편성
 - * 2단계 재정분권의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 포함('23년 1,134억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자치경찰사무가 명시('21. 12. 28.)되어 국고보조금 편성·지급 불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① 다만, 별표 2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295. 자치경찰사무(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 재정분권 경과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개요

〈재정분권 경과〉

-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 강화 및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추진, 1단계('20년) 및 2단계 완료('21년)
 - * 국세-지방세 비율을 현행 8:2에서 7:3('22년 목표)을 거쳐 6:4 수준까지 개선 목표

<재정분권 주요내용>

- (1단계:'19~'20) : △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 △ 소방안전교부세율 25%p 인상
△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3.6조원)
- (2단계:'20~'21) : △ 지방소비세율 추가 4.3%p 인상(4.1조원) △ 지역소멸대응
기금(1조원) 지원 △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2.3조원)
- 자치경찰사무 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 포함

- 2단계 관련 법안 발의 및 통과('21.8·9월), '22.1월부터 본격 시행

※ 다만, 경찰청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 시까지 단계적 이양을 희망하는 경찰청의 입장을 반영하여 '23년부터 시행 결정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 자치경찰사무 예산은 2단계 재정분권의 2차 사업에 포함되어 '23년부터 이양 예정이며, 원활한 지방이양을 위해 4년간 사업금액 보전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1단계 전환사업 (3.56조)	이양 결정	← '20년 이양, 3년간 보전 →			← 4년간 추가 보전 →			
2단계 전환사업 (2.25조)	1차 (1.03조)			이양 결정	← '22년 이양, 5년간 보전 →			
	2차 (1.22조)			이양 결정	← '23년 이양, 4년간 보전 →			

- 국가는 지역상생발전기금 계정으로 전환사업 예산을 편성, 본 기금에서 각 자치단체로 금액을 배분하여 예산 지원
 - － 일부 시·도에서 '22년 국고보조 1,299억원보다 '23년 보전금액이 1,134억원('21년 기준)으로 약 165억원 삭감되었다고 주장
 - － 행안부(재정협력과)는 모든 부처 대상, 동일 기준('21년)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하였기에 경찰청만 예외를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
 - － 2단계 재정분권으로 인해 2조 2천억원 증가한 시·도의 예산으로 예산차액(약 165억원) 부분에 대하여 충당, 안정적 예산 운용 가능

< 2단계 재정분권 관련 재정변화>

(단위: 조원)

지방재정 부담(㉠+㉡)	(3.1)	지방재정 확충(①+②+③)	+5.3
		지방세 확충(①)	+4.1
㉠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 지방 이양	(2.3)	①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4.3%p ↑)	+4.1
		② 지역소멸대응 기금 지원	+1.0
㉡ 지방교부세 자연 감소	(0.8)	③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 핀셋지원	+0.2
※ 순확충 총 2.2조원(지방소비세 순확충 1.0, 지역소멸대응기금 지원 1.0, 국고보조율 인상 0.2)			

□ 향후 계획

-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및 '시·도 자치경찰특별회계 설치법(가칭)' 제정 검토 중
- 현재 유관부처(기재부·행안부) 협의 및 조문 제정 작업 중으로 '22년 행정안전위원회 구성 후 관련 법령 제정 추진 예정